



주간통일정세 2009-33(2009.08.10~08.1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3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김정일, 함경남도 함흥서 현지지도(8/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대극장에서 북한군 장병들과 함께 연극 ‘네온등 밑의 초병’ 공연을 관람했다고 북한 언론매체들이 12일 오후 보도, 북한 매체들은 이날 이른 오전에는 김 위원장이 함흥시에 있는 김정숙해군대학을 시찰했다고 보도
-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연극 공연을 관람한 일시는 밝히지 않아 그가 해군대학 시찰과 같은 날 공연을 관람했는지 다른 날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 이날 공연 관람 후 김 위원장은 “공연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장구한 기간에 걸쳐 마련한 조종 친선을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며, “문화예술 교류는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을 증진시키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공연 관람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비롯한 북한군 지휘부와 태종수 함경남도당 책임비서, 당 중앙위원회 최태복, 김기남 비서, 당 중앙위 부장들,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 북한의 당.군.정 최고위 간부들이 대거 수행

나. 정치 관련

● **北, 을지연습에 우리식 보복 대응(8/16,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을 “침략전쟁행위”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우리식의 무자비한 보복으로,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16일 발표한 담화에서 “상전과 주구가 한짝이 되어 우리에게 대한 제재와 ‘강한 압박’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려는 이번 핵전쟁 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과녁으로 설정한 침략적인 전쟁행위”라고 주장
- 그는 UFG가 방어용 군사연습이라는 설명에 대해 “이 핵전쟁연습은 결코 그 누구의 위협을 막고 조선반도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무력시위가 아니다”라고 반박
- 대변인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면 우리도 핵으로 맞설 것이며 미사일로 위협하면 우리도 미사일로 맞설 것이고 제재를 행동으로 옮기고 대결을 극한점으로 끌고간다면 우리는 우리 식의 무자비한 보복으로,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단의 격동상태에 있는 우리 군대의 철의 의지와 단호한 입장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



● 통일신보, 반복대결 정책 전환 공세(8/14,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것은 남한 정부의 “반공화국(반북) 대결정책” 때문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데로 정책전환”을 할 것을 주장
- 15일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통일신보는 14일 ‘민심을 오도하는 불순한 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남한 정부가 ‘북과의 대화는 북의 태도와 입장에 달려 있다’, ‘북이 유화적으로 나오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로는 언제 가도 북남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
- 신문은 특히 “남조선 보수집권 세력이 지금 북남사이의 현안문제들과 관련하여 ‘정부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느니 ‘믿고 지켜봐 달라’느니 뭐니하고 너스레를 피우지만 보수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한 일이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
- 통일신보는 ‘무모한 단계에 이른 북침전쟁 도발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국군 특수전사령부의 해상침투훈련과 국방부의 민사작전 계획 등을 거론하며 “전쟁연습이 계속되고 무력증강이 날로 강화되는 속에서는 악화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며 “반공화국 대결정책”의 전환을 요구
- 이 신문은 ‘민족공조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글에선 남한이 “외세와는 ‘혈맹’과 ‘동맹’을 부르짖으면서도 피를 나눈 동족에 대해서는 ‘주적’이니 ‘제2의 서해충돌사건 불사’니” 하고 있다며 “민족공조와 외세와의 ‘공조’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민족공조”를 주장

● 통일신보, 김정일-정주영 ‘깜짝면담’ 詩로 소개(8/14,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14일자에서 지난 1998년 10월말 소떼를 몰고 2차 방북했던 정주영 명예회장의 숙소를 김정일 위원장이 찾아 면담하게 된 과정을 시인의 회상 형식으로 다룬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시를 실음.
- 시는 당시 “방방곡곡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던 김 위원장이 지방의 한 공장을 눈앞에 두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평양방문을 마치고 이튿날 떠날 것이라는 보고문을 받아들자 차를 세우게 한 채 자신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을 만날 것이냐 정주영 명예회장을 만날 것이냐 망설이다 차를 평양으로 돌리게 했다는 식으로 묘사
- 시는 “안타까움에 젖은 일꾼(간부)들”이 “장군님, 공장 종업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김 위원장이 “지금 평양에선 남녘동포가 나를 기다리고 있소”라며 “되돌아 천리 평양길에” 올랐다면 “숭고한 민족애”를 찬양
- 김 위원장은 깊은 밤 정 회장이 묵고 있던 숙소에 도착, 정 회장을 만나 “금강산 관광 사업도 민족을 위해 아주 좋은 일”이라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은 선생에게 맡기니 한번 잘해보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시는 소개



- **北, '사상주입 전초' 평양 유선방송국 60돌(8/14, 조선중앙방송)**
 - 평양시의 유선방송국(국장 김창국)이 창립 60돌을 맞아 13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념보고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4일 보도, 이번 창립 60돌 기념보고회에는 광범기 내각 부총리, 류영섭 체신상, 김해성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
 - 북한 당국은 이 유선방송 청취를 위해 모든 가구에 스피커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각 지역 유선방송국에서 송출하는 방송을 주민들이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 유선방송국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제작하는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을 중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편집한 자체 방송을 함께 내보냄.
 - 평양시 유선방송국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라디오총국 제3방송편집국에서 제작하는 제3방송도 송출해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 제3방송은 각 가구에서 스피커를 통해서만 청취할 수 있는데,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되는 내용을 주로 전달하는 수단

- **김영일 부상, 美와 협상 용의(8/14, 연합)**
 - 베트남을 방문한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한 이후 처음으로 14일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공식 표명, 김 부상은 하노이에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항상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변
 - 북한 고위관리가 해외 방문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김 부상은 제2차 북한-베트남간 차관급 정례 정책교류협의회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 중이었음.

- **北, 南나로호 발사, 안보리상정 주시할 터(8/10, 북한 외무성 대변인)**
 - 북한 외무성은 10일 남한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발사 계획을 거론,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남조선의 위성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키는지 주시해볼 것”이라고 주장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남한이 러시아의 기술협조를 받아 곧 위성발사를 하게 된다는데 “4개월 전에 6자회담 참가국들은 우리가 진행한 과학위성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가 규탄하고 우리에게 대한 제재를 실행에 옮긴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언급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자신들에 대한 안보리의 조치로 “6자회담의 생명이고 기초인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회담은 종말을 고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남조선의 위성발사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 평등의 원칙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허물어졌는가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명백히 증시될 것”이라고 덧붙임.



- **노동신문,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강조(8/8, 노동신문;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8일 “북남관계를 개선해야 민족적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실현할 수 있다”며 “북과 남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책임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간다면 조선반도에서 얼마든지 군사적 대결과 전쟁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
 - 평양방송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동족 대결정책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만일 이명박 일당이 동족대결정책을 추구하지 않았더라면 북남관계가 지금처럼 대화도 없고 협력도 없는 파국상태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도
 - 신문은 이 논설에서 “이명박 일당의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 정책은 총파산을 면치 못한다”는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동족대결 정책”이라고 강력 비난

다. 경제 관련

- **베네딕트 수도회, 北라선시인민병원 확장(8/14, 미국의 소리방송)**
 -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한 종파인 베네딕트 수도회가 자신들이 후원하는 북한 라선시 연주동의 인민병원을 확장키로 하고 7월 초 수도회 수장이 북한을 방문, 이 병원의 외래병동 건립건에 대해 북한 당국과 합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4일 독일의 정치주간지 ‘라이니셔 메르쿠어’를 인용해 보도
 -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장인 노트커 볼프 수석 아빠스는 7월초 라선 방문 때 두 차례 이 병원을 방문했으며 이 중 한번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 “많은 주민들이 진료 받는 것을 직접 보고 후원금이 전용되거나 특권층만 병원을 이용한다는 일부의 의심을 불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독일 주간지는 소개
 - 2005년 병원 개원식에도 참석했던 볼프 수석 아빠스는 “그 때에 비해 현지 분위기가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주택들의 외관이 밝은 색깔로 단장되고, 교통량이 상당히 늘었으며 택시들도 운행되고, 두 개의 주유소가 새로 생겼다고 설명
 - 그는 “(이번 합의에) ‘외국인 전문가’들을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했지만, 정작 파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
- **北, 철 생산·이용 규제 ‘흑색금속법’ 제정(7/23, 7/29, 8/4, 8/5, 민주조선)**
 - 북한이 철과 그 합금의 생산, 공급, 이용 및 파철 관리를 규제할 목적으로 5개장 58개조로 구성된 ‘흑색금속법’을 제정, 민주조선 최근호의 ‘법규해설’ 코너를 통해 4차례로 나눠 새로 제정된 이 법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으나 언제 채택됐는지는 밝히지 않음.
 - 민주조선에 따르면 이 법은 제1장 흑색기본법의 기본(제1-9조), 제



2장 흑색금속의 생산(제10-23조), 제3장 흑색금속의 공급과 이용(제24-33조), 제4장 파철관리(제34-50조), 제5장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51-58조)로 구성

- 흑색금속의 범주에 대해 “철과 그 합금”이며 여기에는 “선철과 합금철, 입철, 해면철, 강철, 합금강, 압연강재 2차금속가공제품 같은 것이 속한다”고 규정
- 신문은 법의 제정 목적이 “흑색금속의 생산과 공급, 이용, 파철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흑색금속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힘.

● **北, 비료 100만t, 알곡 1천만t 생산 목표(8/12, 조선신보)**

- 북한은 함경남도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평안남도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석탄 가스화 시설을 전면가동하는 2012년, 비료 100만t에 알곡 1천만t을 생산함으로써 비료와 식량문제를 자체 해결한다는 목표라고 조선신보가 12일 보도
- 조선신보는 북한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대 말부터 토지정리, ‘자연흐름식물길’ 건설, 다수확 품종 개발, 과학적인 영농기술 도입 등 “(농업) 생산구조의 개선, 생산조건의 보장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강구해왔으며, “농업증산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고리인 “비료의 정상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석탄 가스화 공정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 이 가운데 흥남비료는 동부지구에서 나오는 갈탄을, 남흥청년은 서부지구에서 나오는 무연탄을 각각 원료로 쓰는 설비를 갖추.
- 1970년대 세워진 남흥청년에서 지난해 설비를 시작한 석탄 가스화 공정은 곧 완공돼 올해안에 비료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 흥남비료는 “내년에 한개 계열을 설치해 2011년부터 여기서 생산한 비료를 농장들에 공급”하고 또 하나의 계열은 2012년까지 비료 생산의 체계를 완비할 계획
- 2012년 두 기업소의 공정이 “만가동”되면 “알곡 1천만t을 담보하는 대량의 비료를 전국의 협동벌에 제공하게 된다”고 흥남비료의 흥경남부지사장은 말했는데, 이러한 전망은 “질소비료 1t을 쓰게 되면 쌀이 10t 나온다”는 ‘1:10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

● **노동신문, 기술혁명의 폭풍속에 뛰어들자(8/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11일 ‘침단을 돌파하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컴퓨터수치제어(CNC)설비를 만드는 공작기계공장인 ‘련하기계’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임에도 제재를 뚫고 침단 공작기계를 자체 생산해냄으로써 북한이 “21세기 경제발전의 기본열쇠”를 들어쥐게 됐다고 주장하며 침단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
- 련하기계는 컴퓨터수치제어(CNC) 공작기계를 만들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음.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련하기계에 대해 “나는 ‘련하기계’를 사랑합니다. ‘련하기계’는 나의 ‘구면친구’가 됐습니다. ‘련하기계’는 선군시대 기계공업의 훌륭한 상징입니다”라고 말했으며, 지난 1995년 4월29일엔 련하기계가 만든 첫 CNC기계를 보고 “‘련하기계’라는 그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었다”고 전해 김 위원장이 련하기계를 집중지원하고 있음을 시사

● 북한제작 조형물 西阿 ‘상징물’ 되나(8/11, 연합)

- 북한이 세네갈에서 제작 중인 ‘아프리카 르네상스 상징 조형물’이 그 모습을 점차 드러내면서 서아프리카의 대표적 상징물로 자리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세네갈 다카르 국제공항에서 시내 중심가로 진입하는 첫 길목에 자리한 이 조형물은 아이를 품은 부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남편의 두상 등 일부만을 제외한 대부분이 10일 현재(현지시각) 조립된 상태- 구릿빛 피부에 다부진 몸매로 사내 아이를 어깨에 앉힌 채 아내를 품에 안은 조형물 속의 남자 모습은 금방이라도 대서양으로 돌진이라도 할 듯 역동적으로 표현돼 있음.
- 세네갈 압둘라이 와드 현 대통령이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이 조형물은 오는 12월 다카르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3회 흑인문화축전’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음. 세네갈 정부는 지난 1977년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제2회 축전에 이어 30여년만에 제3회 대회를 준비하면서 ‘아프리카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재도약하는 아프리카의 모습과 문화적 우수성 등을 세계에 전달한다는 목표를 야심차게 세웠음.
- 이 축전의 최대 이벤트로는 단연 ‘아프리카 르네상스 상징 조형물’이 꼽힘. 초대형 조형물로 그 높이만 50m에 이르면서 세네갈은 물론 서부 아프리카의 ‘자존심’을 웅변하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음. 실제 그 규모만을 보았을 때 이 조형물은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동상 자체 높이가 46m인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보다 4m 이상 높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명물 ‘거대 예수상(38m)’도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함.
- 특히 이 조형물을 북한이 만들고 있어 관심을 더하고 있는데, 세네갈 정부는 2008년 국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제작을 북한에 맡겼음. 이에 따라 북한은 만수대해외사업부에서 200여명의 기술자를 세네갈에 파견했으며 제작비는 현금이 아닌 세네갈 토지 일부를 현물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기침체 등으로 ‘제3회 흑인문화축전’이 최근 무기한 연기됐지만 세네갈 당국은 르네상스 상징 조형물의 제막을 위한 준공식은 오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埃투자은행, 北 휴대폰 가입자 2년뒤 56만명 상회(8/1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2년 뒤인 2011년 말에는 56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이집트의 투자은행인 ‘나임 홀딩’이 이집트 이동통신회사인 오라스콤에 대한 투자전망 보고서에서 예상
- 보고서는 지난 3월 말 현재 1만9천여명에서 6월 말에는 4만 8천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올해말에는 12만 3천명, 2010년 말에는 31만명, 2011년 말에는 56만 8천명 등으로 급증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
- 이에 따라 오라스콤이 75%, 북한이 25%의 지분으로 설립한 ‘고려링크’의 총수입도 올해말 4천300만달러에서 2010년말에는 7천만 달러, 2011년말에는 1억3천400만달러로 해마다 두배씩 늘어날 것이라고 ‘나임 홀딩’은 예상
- 보고서는 “오라스콤이 이익금을 북한에서 이집트로 송금하는 방법 등을 북한 당국과 협상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라스콤 경영진이 북한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

● **北,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개막(8/11,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집단체조 ‘아리랑’의 올해 첫 공연을 10일 가졌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 방송은 공연이 열린 5월 1일 경기장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온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로 차고 넘쳤다”며 “주조 외교대표와 국제기구대표, 외국 손님,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소개
- 올해 공연되는 2009년판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말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시찰,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주문하면서 제시된 주민동원용 경제 구호인 ‘강선의 봉화’를 주제로 한 장면과 “날로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을 담은 장면이 새로 들어감.
- 조선신보도 아리랑 공연 소식을 전하면서 올해 판에서 “제3장 ‘행복의 아리랑’ 1경 ‘흰눈덮인 고향집’이 관중들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된다”고 말하고 “백두밀영 고향집을 형상한 1경”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를 받아 새로 만들어졌다고 설명
- 조선신보는 북한 당국의 아리랑 공연 “전통화 방침”에 따라 2007년부터는 해마다 약 2달간의 장기공연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 **北, 건설 수요 증가에 대규모 전자재기지 추진(7/18, 통일신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시찰한 대동강타일공장은 북한 당국이 ‘강성대국’ 건설 시한으로 잡고 있는 2012년 4월까지 2단계 건설을 완료해 대규모 전자재공급기지로 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신보는 7월 18일에 2단계 건설이 끝나면 이 공장에선 각종 기와와 타일, 수지가공 제품을 연간 2억2천500만㎡ 생산하게 된다고 밝힘. 2003년 7월 착공, 5년 9개월만인 지난 4월 15일 완공한 1단계에 이어 2단계 건설 공사에 들어간 이 공장에는 북한돈으로 총 105억원, 미화로 8천77만달러(1달러=약 130원)가 투입될 예정이어서 북한 경제규모로 볼 때 대규모 투자였음.
- 2단계 건설까지 포함해 총 75정보(1정보=3천평)에 들어설 이 공장에선 내외벽과 바닥 타일은 물론 대리석연마타일, 복합유리타일 등을 비롯해 자기기와, 위생자기, 수지가공제품, 조립식건재물, 석탄가스 등을 생산하게 되며 특히 전력공급을 위한 자체 발전소도 갖출 계획이라고 신문은 설명
- 김정일 위원장은 평안남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근처에 자리잡은 이 공장을 지난달 13일 시찰했을 때 이 공장에 대해 “나라의 건재 공업 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국내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생산체계를 확립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언급

● 北, 주민 600만명 아사 위기 직면(8/8,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발간한 7월 전 세계의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은 식량 부족과 해외 원조의 감소란 이중고로 6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다음 추수 때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
- FAO의 아시아지역 책임자인 쉐 팡 박사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봄에 추수했던 보리와 햇감자마저 대부분 소비한 데다 국제사회의 지원마저 여의치 않아 북한의 식량 사정은 지금이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북한이 올해 농사를 짓기에 기상 여건은 좋았지만 비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외부에서 170여만톤의 식량을 들여와야 한다”고 언급
- 팡 박사는 “올해 기상 이변으로 생산량이 줄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날씨도 좋았고, 강수량도 좋았고,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도 없었다”고 전하고 “비료가 쌀 생산량에 큰 영향을 주는데 남한에서 (비료) 지원이 중단돼 생산량이 적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또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보리나 햇감자 등을 추수했지만 이는 1년 생산량의 10%에 불과하고 추수 후 1~2달은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수개월 내에 외부의 식량 원조가 없으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



라. 사회·문화 관련

● 파라솔 달린 네거리 교통정리壇 평양 명물(8/6, 조선중앙TV, 8/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요즘 평양의 네거리들에 희한한 교통지휘초소가 생겨나 사람들의 눈길과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여성 교통보안원(교통경찰)들이 서서 교통정리를 하는 대형 우산이 달린 단(壇)을 소개
- 김 위원장이 교통보안원들에게 계절에 따라 근무용 옷과 비옷, 장화, 눈보호안경, 장갑, 화장품을 보내주고 이번에 단과 우산까지 설치하도록 해줬다는 것.
- 조선중앙TV도 지난 6일 평양 사거리들에 새로 설치된 단과 우산을 소개하면서 우산에는 “밤에도 교통지휘를 하는 데 유리하게” 조명등이 설치돼 있고 “신호봉을 좌우로 움직이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기둥은 곡선으로 돼 있다고 설명

● 北기상연구소, 北전역 가뭄 확산 예보(8/12, 조선중앙TV)

- 북한에서 장마철이던 7월 21일 이후 20일간 넘게 장마가 중단되는 특이 현상이 나타나 일부 지방에선 가뭄이 시작됐으며 앞으로 가뭄이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북한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연구소가 예보
- 중앙기상연구소의 리철수 부소장은 12일 방송된 조선중앙TV와 인터뷰에서 “올해 장마철에는 지난 7월부터 20일까지 거의 열흘나마(넘게) 전반적 지방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린 후 21일부터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적게 내리거나 거의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

● 北, 마약사범 급증에 체제부식 우려(8/11, 연합; 제291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보안 당국은 북한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자 이들을 체제혼란 요인으로 간주, 마약사범에 대해 보안사범 차원에서 단속과 사법처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11일 소개
- ‘오늘의 북한소식’은 제291호 에서 북한 노동당 보위부, 보안서, 사법검찰 기관들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3월까지 마약단속을 강화한 결과 “적선에 흡수돼 간첩책동을 하는 범죄자들이 많이 잡혔다”고 북한 보안 당국 관계자가 주장했다고 소개, 이에 따라 2008년 6월부터 마약사건 규모가 크거나 정치적 문제에 연루된 마약사건들은 모두 보위부에서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소식지는 전언
- 중앙당의 한 간부는 “보위부 자료를 보면, 마약 중독자의 숫자가 각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아 우리 사회 내부가 무질서해지고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썩어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법적 처리가 약하면 인차(이내) 적들에게 (북한 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소



식지는 소개

- 북한 보안 당국이 북한 전역의 마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통적인 마약 생산지인 함경남도 함흥은 물론 새로운 마약 생산지로 급부상한 평안남도 순천시와 평성시 등에서도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식지는 전언

● 北평양서 민속전통 해설 ‘이동강의’(8/10, 조선신보)

- 북한 조선민족박물관의 강사들이 평양 시내를 돌며 근로자들에게 “민속전통을 해설하는 이동 강의”를 펼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0일 보도,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말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민속거리를 돌아보며 “근로자들 속에서 민속전통 교양을 원리적으로 할 데 대하여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박물관측은 “연초부터 의욕적인 선전사업을 계획”했고 “이동 강의는 그 일환”이라고 신문은 소개, 박물관 강사들은 “선조들이 창조하고 계승 발전시켜온 우수한 민속예법, 민속놀이, 민속음식 등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고 보도
- 이동강의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326전선공장, 평양종합인쇄공장, 평양방직공장, 기상수문국, 평양교예단을 비롯한 평양시의 공장, 기업소들과 비생산단위 뿐 아니라 학교와 인민반 등 주민행정 단위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언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제재 관련

● 안보리, 대북결의 잠정보고 시한 연장(8/16, 연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1874호에 따라 9월 12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전문가 패널의 잠정보고서 제출 시한을 1개월 가량 연장한 것으로 알려짐.
- 외교소식통은 1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구성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됐다”며 “이에 따라 안보리는 9월 12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전문가패널의 잠정보고서를 패널 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양해했다”고 설명
-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8월 14일 외교통상부 송영완 국장을 포함한 7명의 전문가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임명했으며 이들의 임기는 9월 초 시작할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전문가패널의 잠정보고 제출 시한이 9월 12일에서 10월 초까지 1개월 정도 늦춰질 전망
- 지난 6월 1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는 유엔 사무총장이 제재 위원회와 협의 하에 첫 1년간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7인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 결의 채택 후 90일 내에 안보리에 잠정 보고를 제



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소식통은 패널 구성이 지연된 것과 관련, “전문가패널 선정 과정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의 전문가로만 구성할 것이냐, 다른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
- 전문가패널은 1년간 유엔 사무국 소속으로 뉴욕에 상근하며, 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 보조,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구 등의 제재 이행 관련 정보 수집, 검토, 분석, 안보리와 제재위원회, 회원국 등에 이행 개선을 위한 권고,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안보리에 최종 보고서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

● **인도, 나포 北 선박에 핵물질 없어(8/14, 연합)**

- 인도 당국은 최근 자국령 해안에서 나포한 북한 선박 MV 무산호에서 핵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힘.
- 인도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의 고위 경찰 관계자인 아쇼크 찬드는 “북한의 선박에서 어떤 핵 물질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북한 선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 인도 당국은 MV 무산호가 신고 있던 설탕 화물을 추가 조사할 계획임.
- 인도 당국은 자국령인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에 들어온 후 자국의 승낙 없이 허트 베이에 정박했던 MV 무산호를 8일 6시간가량 추격해 공포탄까지 쏜 끝에 나포, 인도 당국은 특히 해당 선박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미얀마 인근에 갔는지를 조사

● **홍콩, 대북투자 ‘조선펀드’ 조사(8/14, 자유아시아방송)**

- 홍콩 정부는 대북한 투자기금인 ‘조선펀드’와 관련회사 2개에 대한 정보를 법 집행기관에 넘겨 대북 제재관련 현행 홍콩법에 대한 저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이 방송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대변인이 이 방송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조선펀드와 이 펀드의 자금운영사인 ‘앵글로아시아’, 그리고 앵글로아시아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고려아시아’가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홍콩 역시 아직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
- 홍콩 정부는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1718호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만들어 시행중이며, 최근에는 중국 외무성의 지침에 따라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보조법안의 제정을 준비



- **北지원 미얀마 땅굴, 핵시설 징후 없어(8/13, 미국의 소리방송)**
 - 미국의 민간 핵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가 북한의 지원을 받아 굴착중인 것으로 알려진 땅굴들 사진에서는 핵시설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
 - 연구소 폴 브래넨 연구원은 VOA와 인터뷰에서 “지상에서 찍은 사진들에는 지하 또는 실내로 보이는 저장소와 댐 수문, 터널 입구 등이 보이지만 핵시설의 흔적은 없다”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중앙에 원자로 건물물이 있고 그 둘레에 보다 낮은 지붕들이 있고 냉각탑을 갖추거나 물가에 위치해야 하는데 공개된 사진들에는 그같은 특징이 없다”고 언급
 - 그러나 ISIS는 정보소식통을 인용, 정밀 기계류가 북한에서 미얀마로 전달됐으며, 핵관련 물질 구입 등을 이유로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은 북한 원자력총국 산하 남천강 무역회사관련 인물들이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

나. 북·미 관계

- **김정일, 클린턴과 대화때 아주 적극적(8/15, 연합)**
 -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수행한 존 포데스타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클린턴 전 대통령과 대화하는 동안 ‘아주 적극적이었다’(fully engaged)고 14일 밝힘.
 -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에 배석했던 포데스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 인상을 묻는 질문에 “대화는 꽤 직설적(straightforward)이었으며 그는 아주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거부
- **美대북제재전담반, 내주 亞 4개국 방문(8/13, 미국무부)**
 - 필립 골드버그 대북 제재조정관이 이끄는 미국 대북제재 전담반이 한국을 비롯,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연쇄 방문할 계획이라고 미 국무부가 13일 발표
 - 골드버그 방문팀에는 재무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관계자들도 포함, 이들은 다음주 초 싱가포르로 떠난 뒤 방콕, 서울을 거쳐 도쿄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골드버그 조정관은 “아세안 의장국이기도 한 태국과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핵심 회원 국가로, 두 나라는 역내 무역, 금융 중심지일뿐 아니라 중요한 해상 국가”라고 언급, 실질적인 대북 금융제재 및 해상 화물 검색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임을 시사, 그는 “모든 방문 국가들에서 공중, 해상, 육상 화물 검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 결의의 금융제재 조항을 검토하는 한편 가능하다면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또 이르면 8월 말 다시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면 서 “구체적인 방문 날짜를 조율중”이라고 언급

● 미국무부, 북한내 혼란위험 알지 못해(8/12,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12일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 사실상 그 가능성을 부인
-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과 관련한 질문에 “그들(북한)은 제 자리에 지도부가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주요한 혼란(dislocation)이 있을 어떤 위험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이어 “미국은 다른 역내 국가들과 같이 그 지역의 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안정도 이에 포함된다”고 언급
- 그는 “우리가 보고 싶은 북한의 행동은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임을 명백히 해 왔다”고 거듭 지적

● 美, 北 광선銀 제재대상 추가지정(8/12, 연합)

- 미국 재무부는 11일 북한의 조선광선은행(KKBC)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활동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1874호에 따라 7월 16일 남천강 무역회사, 이란에 소재하고 있는 홍콩 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5개 회사를 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한 이후 미국이 이들 기업과는 별개로 금융제재 대상 기업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중국 단둥(丹東)에 지점을 둔 조선광선은행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직을 직접 관장하는 비자금 창구로 알려져 있음. 조선광선은행은 미국에 의해 WMD 확산 관련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이미 지정된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에 대한 금융거래를 지원해온 혐의를 받고 있음.
- 조선광선은행은 이번 지정으로 미국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미국의 금융과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의 기업과 개인도 앞으로 이 은행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됨.
- 美재무부는 단천상업은행이 2008년 이후 조선광선은행을 이용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이체했고 이런 자금들에는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의 자금이체와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가는 관련 자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



● **北, 美와 관계개선 원하는 듯(8/10, 연합)**

- 제임스 존스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9일(현지시각)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밝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방북결과에 대해 1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존스 보좌관은, 이날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4일 이뤄진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은 미국과 새로운 관계, 더 나은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indicated)”라고 언급
- 그는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 위원장과 클린턴 전 대통령이 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으며 두 사람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언급했다”고 전언
- 그러나 존스 보좌관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기간 (북한에) 공식적인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았으며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서 얻은 것이 사진 촬영 말고는 없다”고 강조

다. 북·중 관계

● **中 룽징, 평양 전세기 관광코스 개통(8/15, 연합)**

- 중국 옌변(延邊)조선족자치주 룽징(龍井)시는 전세기를 이용해 평양 등 북한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새로운 관광코스를 곧 개통한다고 15일 밝힘.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룽징시는 이를 위해 최근 북한의 조선관광총국, 함경북도와 전세기 관광코스 개설 협약을 체결
- 이 관광코스는 룽징에서 북한의 청진에 도착, 어랑 비행장에서 전세기를 이용해 평양으로 간 뒤 3일간 머물며 개성과 판문점, 남포, 서해 갑문, 묘향산 국제친선기념관 등 북한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봄. 8월 10일 처음 공연한 2009년 판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도 관람 가능
- 중국은 지난 4월 투먼과 안투, 단둥 등 접경지역에서의 북한 변경관광을 3년 만에 재개했으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인들로부터 외면받아왔음. 이 때문에 당초 지난 5월부터 운행키로 했던 투먼-함경북도 남양-청진-칠보산 운행 관광철도가 지금까지 운행되지 않고 있음.

● **中, 부녀연합회 대표단 방북(8/10, 조선중앙통신)**

- 진연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부녀연합회대표단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中, 김정일 건강상태 매우 좋다(8/10, 연합)**

- 중국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는 평가를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짐. 베이징의 외교 소



- 식통들은 10일 “중국 측이 최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이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미국 측으로부터 설명받았다”고 밝힘.
- 이들은 또 “중국 측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먼저 미국 기자들을 성공적으로 데려왔으며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했고, 북미 양자간 접촉을 개시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고 전언
 - 이들은 이어 “중국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라면서 “만약 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며, (중국은) 북한의 권력 공백상태를 바라지 않고 있다”고 언급

라. 북·러 관계

● 김정일, 러 대통령과 축전 교환(8/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광복 64돌을 맞아 15일 축전을 교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조선해방 64돌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로씨야(러시아) 인민에게 인사”를 보낸다고 하며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소개
-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선인민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영웅적인 투쟁을 통하여 자유와 독립을 쟁취”했다면서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극동지역에서의 일본군국주의 타승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친 쏘련군 병사들에 대한 추억을 귀중히 여기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언급

마. 북·일 관계

● 日 민주, 화물검사법 임시국회서 제정 추진(8/14, 산케이 신문)

-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8·30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7월 21일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된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안을 차기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4일 보도
- 특히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한 이후 곧바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화물검사 대상 품목을 정하는 정령(政令)을 사전에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도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실시 방침을 명기한 바 있음.
- 민주당이 검토 중인 법안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결의에서 정한 핵, 미사일 관련 물자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



3. 대남정세

● 김정일 이름 석자 말했다 뿐(8/15, 연합)

- 북한에 억류됐다가 136일 만에 돌아온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는 14일 가족들에게 “북한이 잡아갈 때 (협의를 적은) 통지문을 죽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됐다”며 “잡혀갈 건덕지(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금방 나올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씨는 억류돼 있던 기간 개성 지역의 한 여관에서 북한 관계자 4명이 지키는 가운데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가족은 “개성공단 내의 여관”이라고 전했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안에는 여관이 없다”며 “개성시내의 민속여관이나 자남산여관 등으로 보인다”고 언급
- 유씨는 조사 중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언급, 통일부 당국자도 “유씨 몸에 외상은 없다”고 설명, 유씨는 억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풀려나기 전 “조사한 내용이 다 맞느냐”는 북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석방된 것으로 전해짐.
- 유씨는 석방 당시 상황에 대해 “어제(13일) 오후 북한 관계자가 갑자기 가자고 해 오후 3시쯤 여관을 출발했으며 석방 직전까지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현정은 회장, 김양건과 만찬(8/14, 연합)

- 방북 중인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이 14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만찬을 가졌다고 현대아산이 밝힘.

● 정부, 유씨 석방 대가 없었다(8/13, 통일부)

-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지 136일만인 13일 석방된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44)씨가 추방 형식으로 석방됐으며 석방 대가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힘.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유씨 석방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북측은 자기 측 출입국사업부에서 유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낭독하고 추방 형식으로 우리측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소개, 또 “석방과 관련해 대가를 지불한 것은 없다”고 밝힌 뒤 “정부는 억류 직후부터 석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대도 사업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 천 대변인은 “정부는 유씨가 석방된 것과 관련, 북측에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현대아산 측은 자사 직원이 장기간 억류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북한 당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
- 천 대변인은 유씨 석방 및 귀환 경로에 대해 “유씨는 오후 5시10분



경 개성공단 내 북측 출입국 사업부로부터 현대아산측으로 신병이 인도됐고 이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로 다시 신병이 인계된 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법무팀장, 현대아산 개성공단 총소장 등과 함께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우리측 지역으로 돌아왔다”고 전언

● 南단체지원 北 유일 전문안과병원 성과 커(8/12, 노동신문)

- 북한 유일의 안과전문병원인 ‘평양안과병원’과 이 병원 의료진의 강습을 받은 각 도의 인민병원 의료진이 북한 전역을 돌면서 백내장 등의 안과 수술과 검진 활동을 펼쳐, 6, 7월 두달 사이에만도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시력을 되찾았다고 노동신문이 12일 보도
- 평양안과병원은 국제라이온스협회와 한국라이온스협회가 건립을 지원한 ‘평양라이온스안과병원’이 정식 명칭,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 관계자는 “북한에서 평양 이외의 지역에는 전문 안과병원이 없기 때문에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평양라이온스안과병원으로 보내기도 하며, 병원측이 지방을 순회하면서 진료하기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
- 이 관계자는 “북한에 특별히 백내장이나 녹내장 환자가 많은지 여부는 파악된 게 없지만 평양라이온스안과병원을 지은 뒤 시력관련 질환의 치료를 위한 기술과 자재를 많이 지원해 왔다”고 소개
- 평양라이온스안과병원은 한국라이온스협회 주도로 국제라이온스협회의 150여개 회원국에서 모은 800만 달러(80억원)가 투입돼 2005년 6월 15일 평양 통일거리에 건립됐으며, 연건평 1천 평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76개 병상을 갖췄음.
- 노동신문은 “보건성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평양과 각 도인민병원의 안과의료 일꾼들이 전국적 범위에서 집중적인 안과 검진과 수술 의료봉사를 활발히 벌여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

● 北, 현정은 회장 평양도착 보도(8/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오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개성을 경유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 통신은 현 회장의 평양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방북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에 따른 것임을 밝힘. 리종혁 아태 부위원장과 관계부문 일꾼들이 현 회장 일행을 맞이했다고 통신은 소개
- 현 회장은 10일 오후 1시50분께 경기도 파주의 도라산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방북길에 올랐음. 이번 방북에는 만딸인 정지이 현대 U&I 전무와 현대아산의 계약지원 담당 실무급 부장 1명이 대동했고, 이들은 2박3일간 평양에 체류하며 북측 인사들과 유씨의 석방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안보리, 대북결의 잠정보고 시한 연장 (8/16)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1874호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전문가 패널의 잠정보고서 제출 시한을 1개월가량 연장한 것으로 알려짐. 외교소식통은 1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구성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됐다”며 “이에 따라 안보리는 9월 12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전문가패널의 잠정보고서를 패널 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양해했다”고 말함.
-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외교통상부 송영완 국장을 포함한 7명의 전문가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임명했으며 이들의 임기는 9월 초 시작할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전문가패널의 잠정보고 제출 시한이 9월 12일에서 10월 초까지 1개월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6월 1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는 유엔 사무총장이 제재위원회와 협의 하에 첫 1년간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7인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 결의 채택 후 90일 내에 안보리에 잠정 보고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소식통은 패널 구성이 지연된 것과 관련, “전문가패널 선정 과정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의 전문가로만 구성할 것이냐, 다른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함.
- 전문가패널은 1년간 유엔 사무국 소속으로 뉴욕에 상근하며 ▲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 보조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구 등의 제재 이행 관련 정보 수집·검토·분석 ▲안보리와 제재위원회, 회원국 등에 이행 개선을 위한 권고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안보리에 최종 보고서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됨.

● 美 대북제재전담반 내주 亞 4개국 방문(8/14)

- 필립 골드버그 대북 제제조정관이 이끄는 미국 대북제재 전담반이 다음 주 한국을 비롯,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연쇄 방문할 계획이라고 미 국무부가 13일 발표함. 골드버그 조정관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및 확산 활동에 대응한 유엔 결의 1874호와 1718호 이행을 위한 공조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내주 아시아 관련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힘. 골드버그 방문팀에는



- 재무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관계자들도 포함됨.
- 이들은 다음주 초 싱가포르로 떠난 뒤 방콕, 서울을 거쳐 도쿄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미국 대북제재 전담반의 아시아 방문은 7월 초 중국과 말레이시아 방문에 이어 두번째로, 특히 북한의 활동이 활발한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하는 것은 동남아에서 대북 봉쇄망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됨.
 - 골드버그 조정관은 “아세안 의장국이기도 한 태국과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핵심 회원 국가로, 두 나라는 역내 무역, 금융 중심지일뿐 아니라 중요한 해상 국가”라고 언급, 실질적인 대북 금융제재 및 해상 화물 검색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임을 시사함. 그는 “모든 방문 국가들에서 공중, 해상, 육상 화물 검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 결의의 금융제재 조항을 검토하는 한편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것”이라고 말함.
 -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번 순방의 목적은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와 유엔의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그는 또 이르먼 이달 말 다시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방문 날짜를 조율중”이라고 말함.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어 대북제재 이행 협의를 위한 그동안의 아시아 국가 및 러시아 방문 성과를 설명하면서 대북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주의 권고에 이들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고, 자국 은행에 이런 권고문을 내려보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그는 “은행들에 그런 말(주의 권고)이 전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북 거래와 관련한 아시아와 러시아 은행들의) 감시에 대한 강화된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며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이와 함께 그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 방침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러시아나 중국에서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어떤 입장의 변화도 보지 못했다”고 강조함.
 - 그는 “비핵화와 미사일 확산 등의 문제에서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비핵화의 길로 북한이 다시 합류하길 원한다면 이를 위한 명확한 길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면서 “강남 1호 회항 등에서 효과도 봤지만, 완전한 성과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함.

나. 미·북 관계

● <美, 북·미대화 조건 완화됐나> (8/16)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미관계가 주목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언급에 최근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 있음. 특히 그동안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사실상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내세워 왔던 미국이 북한의 ‘정치적 약속’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한결 완화된 입장을 보여 배경이 주목됨.
- 미국은 6자회담을 거부하며 북·미 직접대화를 희망하는 북한에 대해 북·미 대화는 6자회담 틀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조치를 다시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를 북한이 취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 등 두가지를 사실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 왔음. 미국의 두 조건 가운데 6자회담 틀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지만 비핵화 조치 이행과 관련된 요구 수준은 구체적 조치 이행에서 정치적 약속으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
 -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의 14일 정레브리핑에서 이는 좀 더 구체화됐음.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중단 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모두 이행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이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과정일 수 있지만 반드시 긴 과정일 필요는 없다”면서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북한의 정치적 약속이 있으면 된다”고 말함.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다시 이행하겠다는 약속만 하면 구체적 이행조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임.
 - 이는 지난달 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방송에 출연, 9.19 공동성명 비핵화 합의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구체적 조치들을 취하면 6자회담의 맥락에서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임.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당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구체적 조치와 약속 이행”이라면서 “그들이 그것을 시작하고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대화에 합의한다면 그때 앞으로의 진전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이 같은 미국의 변화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미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움직일 수 있는 다소의 공간을 주려고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임. 뉴욕채널을 통한 북·미간 물밑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앞으로 대화의 형식과 조건에 대해 어떤 진전을 보일지 더욱 관심인 것도 이 때문임.

● 그레그 “美, 北과 고위급협상 해야” (8/12)

-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은 12일 “오바마 미국 정부는 평양과 고위급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함. 제주평화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그레그 이사장은 “오바마 정부에 대해 제안을 하자면 앞으로 3년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그는 특히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년이 되는 해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북한과 지속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중요하며 북한도 6자회담에 북



귀해야 한다”고 말함.

- 그레그 이사장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방북과 관련, “매우 유용한 방문이었으며 오바마 정부와 북한간의 관계가 시작되는 계기라고 본다”고 말함. 그는 “그동안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끌기를 원했지만 오바마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돼있었고 의료개혁 등 현안을 추진하다 보니 북한에 치중할 여력이 없었다”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이런 상황을 종식시켰다”고 말함.
- 그레드 이사장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에 언급, “분명하게 말해 핵이 없는 한반도가 목표”라면서 “일각에서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핵의) 봉쇄로 전환됐다는 언론의 관측이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으며,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유하는 목표”라고 강조함. 그는 부시 행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첫 6년을 허비했다. 악의 축이라는 낙인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심대하게 손상시켰다”면서 “마지막 2년간 대화를 했으나 체니와 볼턴 같은 강경파가 존재하면서 북한은 부시 정부와의 대화에 충분한 신뢰를 보내지 못했다”고 말함.
- 한편, 함께 회견에 나선 윌리엄 오버홀트 하버드대학 교수는 “대북 제재에 있어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에 중국이 나름대로 협조를 하고 있다”고 평가함.

● 허버드 “클린턴방북, 북핵분위기 전환시킬것” (8/12)

-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토머스 허버드 코리아 소사이어티 신임 이사장은 12일 “북한에 억류된 미국 기자들을 성공적으로 귀환시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허버드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핵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함. 그는 “우리(미국)는 북한과 진지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제 공은 북한 코트로 넘어갔다”고 밝힘.
- 허버드 이사장은 “북핵 문제는 북·미 양자간 이슈가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의 이슈”라고 전제한 뒤 “6자회담이 가장 바람직한 틀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반드시 6자가 항상 동시에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음.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방북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제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다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기자들을 무사히 데리고 나왔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함.
-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에 대한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허버드 이사장은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측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미



국 기자들 석방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서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번 방북을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함. 그러면서 그는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음.

● <美, 대북제재 원칙불변 재천명> (8/12)

- 미국 재무부가 11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활동과 관련해 북한의 조선광선은행(KKBC)을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추가로 지정한 것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임. 특히 이번 조치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억류 여기자 석방을 위한 방북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이후 북·미간에 새로운 대화무드 조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對) 북한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도 확고해 보임.
-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확산 활동에 관여해온 단천산업은행,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련봉총기업 등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제재의 연장 연상에서 조선광선은행에 대해 제재지정이 추가로 이뤄진 점도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많음. 미국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다른 WMD 관련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토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1718 및 1874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대북제재 후속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함.

● “美, ‘클린턴 디브리핑’ 통보..北 변화없어” (8/11)

- 미국 정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결과를 심층분석한 결과, 북한의 태도에 의미있는 변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제사회의 공조 하에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11일 알려짐. 미국 정부는 이번 주초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관련국들에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결과 디브리핑(Debriefing) 내용과 심층분석 결과를 상세히 설명한 뒤 이같이 의견을 조율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함.
-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미국으로부터 방북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모두 받았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통보받은 내용으로는 북한의 태도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금의 대북 대응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함.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5일 3시간 넘게 이어진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북·미 수교를 포함한 관계 정상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한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50년 동안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한 것으로 안다. 미국이 관계개선에 나서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라며 “관계개선에는 북·미 관계정상화나 북·미 수교라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디브리핑에는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직접 희망했다는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美, 군정 당시 이미 김일성 가짜로 판단” (8/13)

- 해방공간에서 남한을 신탁통치했던 미국 군정은 북한 김일성 주석에 대해 일찌감치 ‘가짜 김일성’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짐. 연합뉴스가 12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연방정부 기록보존소(NARA)에서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미 군정은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이며, 일제 강점기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으로 명성을 얻은 ‘김일성’ 행세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 국내에서는 ‘가짜 김일성’ 논란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우익에 의해 확산됐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돼 옴. 미 군정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8월 1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북한의 한국인들’이라는 인물자료는 본명이 김성주인 김일성이 1924년 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다고 기술함.
- 당시 극비로 분류됐던 이 자료는 항일투사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실제 김일성’의 형제(형인지 동생인지는 불분명함)가 김성주의 아버지라고 언급함. 즉 김성주가 삼촌의 이름을 갖고 항일투사인양 행세했다는 지적인 셈임. 자료는 김성주가 1929~1930년 만주와 조선 국경에서 활동하던 실제 김일성의 유격부대에 합류했으며, 실제 김일성이 55~60세에 숨지자 명령 때문인지 자발적이었는지는 몰라도 자신을 ‘유명한 전사(戰士.김일성)’로 가장했다고 기술함.
- 미 군정 자료는 그러나 김성주(가짜 김일성)는 명석하고 차분하며, 일을 할 때 곧바로 핵심을 잡아 업무를 장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기록함. 이와 함께 이 자료는 김성주가 훈련을 위해 시베리아로 건너간 한국인들 중 한 명으로, 1943년 소련에 의해 유럽에 건너가기도 한 인물이라는 또 다른 설도 있다고 소개함. 자료는 제2차 대전 이후 김성주가 돌아와 북한 공산정권의 지도자와 만주의 조선의용군 지도자가 됐다고 소개하면서 조선의용군 지도자는 명목상의 지도자일 뿐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전함.
- 이에 앞서 미 군정이 1947년 9월 1일자로 작성한 ‘유력 한국정치 지도자 약력’이라는 별도의 자료에도 김일성은 본명이 김성주라고 기술돼 있음. 다만 이 자료에는 김일성을 만주 국경지대의 유격대 지도자라고 언급, 이후 1년 사이에 김일성에 대한 미 군정의 인물정보 내용이 달라졌던 것으로 밝혀짐.

● 美국무부 “북한내 혼란위험 알지 못해” (8/13)

- 미국 국무부는 12일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 사실



상 그 가능성을 부인함.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과 관련한 질문에 “그들(북한)은 제 자리에 지도부가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주요한 혼란(dislocation)이 있을 어떤 위험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 이 같은 언급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결론을 미국이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임.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다른 역내 국가들과 같이 그 지역의 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안정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함. 그는 “우리가 보고 싶은 북한의 행동은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임을 명백히 해 왔다”고 거듭 밝힘.

● 美, 北 광선銀 제재대상 추가지정 (8/12)

- 미국 재무부는 11일 북한의 조선광선은행(KKBC)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활동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1874호에 따라 지난달 16일 남천강 무역회사, 이란에 소재하고 있는 홍콩 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 원자력 총국, 조선 단군 무역회사 등 5개 회사를 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한 이후 미국이 이들 기업과는 별개로 금융제재 대상 기업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앞서 미 재무부는 조선혁신무역을 유엔 안보리 제재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금융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음. 중국 단둥(丹東)에 지점을 둔 조선광선은행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관장하는 비자금 창구로 알려져 있음. 조선광선은행은 미국에 의해 WMD 확산 관련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이미 지정된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에 대한 금융거래를 지원해온 혐의를 받고 있음.
- 조선혁신무역회사는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의해 모기업인 ‘조선련봉총기업’과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됐었음. 조선광선은행은 이번 지정으로 미국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미국의 금융과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의 기업과 개인도 앞으로 이 은행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됨.
- 스텐더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상당히 알려진 조선광선은행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북한 정권이 확산활동을 얼마나 오래 계속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거래도 불법적인 것이 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함. 재무부는 단천상업은행이 2008년 이후 조선광선은행을 이용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이체했고 이런 자금들에는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의 자금이체와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가는 관련 자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함.



- 조선광업개발무역은 북한의 주요 무기수출업체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제품과 장비 수출에 관여해왔다는 이유로 지난 2월3일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금융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음. 재무부는 “조선광업은행의 단천상업은행, 조선혁신무역, 조선련봉총기업과의 연계성 때문에 오늘 조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다른 WMD 관련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토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1718 및 1874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다. 중·북 관계

● 中 룡징, 평양 전세기 관광코스 개통 (8/15)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룡징(龍井)시는 전세기를 이용해 평양 등 북한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새로운 관광코스를 곧 개통한다고 15일 밝힘.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룡징시는 이를 위해 최근 북한의 조선관광총국, 함경북도와 전세기 관광코스 개설 협약을 체결함. 이 관광코스는 룡징에서 북한의 청진에 도착, 어랑 비행장에서 전세기를 이용해 평양으로 간 뒤 3일간 머물며 개성과 판문점, 남포, 서해갑문, 묘향산 국제친선기념관 등 북한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게 됨. 지난 10일 처음 공연한 2009년 판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도 관람할 수 있음.

라. 일·북 관계

● 日 민주, 화물검사법 임시국회서 제정 추진(8/14)

-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8·30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지난달 21일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된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안을 차기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4일 전함. 민주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자민당을 큰 폭으로 앞서면서 집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특히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한 이후 곧바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화물검사 대상 품목을 정하는 정령(政令)을 사전에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도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실시 방침을 명기한 바 있음.
-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시행일을 ‘공포에서 30일 후’로 정했으나, 민주당은 사전에 정령을 제정, 법안 제정에서 정령 공포, 화물검사 시행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임.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위대에 의한 선박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선박검사활동법’도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우선 화물검사 특별조치법 제정에 집중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 민주당이 검토 중인 법안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결의에서 정한 핵, 미사일 관련 물자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 법안에 따르면 화물검사는 해상보안청만이 할 수 있고, 자위대는 선박 추적이나 정보 수집, 화물검사를 실시하는 해상보안청 순시선 경호 등을 하게 됨.

마. 기타

● 北김정일, 16일 현정은회장 면담·오찬(8/16)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6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방송들이 이날 저녁 보도함.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8월16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초청에 따라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현정은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과 그 일행을 접견하셨다”며 김양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했다고 전함. 이번 면담은 현 회장의 방북 7일만에 이뤄진 것임. 현 회장은 지난 13일에는 김양건 위원장과 면담함으로써 김 위원장과 면담 가능성을 높였으나 예상보다 늦춰짐.

● <新평화구상> 한-미, 포괄제안으로 핵포기 촉구 (8/16)

-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담은 신(新)평화구상에서 제시한 포괄적 대북 제안은 최근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이른바 ‘포괄적 패키지’의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적지 않음.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를 내걸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은 미국이 포괄적 패키지의 조건으로 내건 ‘비가역적 비핵화’와 지향점이 같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미국은 비가역적 비핵화 조치와 관련,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 상의 조치를 북한이 구체적으로 취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짐.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동성명에서 규정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포기’의 선언을 의미함.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포기’를 언급한 것과 직접 연결되는 것임. 두 제안 모두 북한에 제공할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는 점도 닮은꼴임.
- 이 대통령은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함. 그러면서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와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힘. 이는 포괄적 패키지의 내용과 관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태국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미관계 정상화는 물론 경제·에너지 지원, 평화체제 구축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은 물론 더 실천적이면서도 구체적임.

- 문제는 실현가능성임.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신평화구상이나 포괄적 패키지를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임.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포괄적 패키지만 수용할 경우 우리도 신평화구상에 담은 내용을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서는 한·미간 굳건한 공조를 통해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 북한의 수용 여부를 떠나 현재 추상적 개념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신평화구상이나 포괄적 패키지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단계까지 격상시키는 것도 한·미 당국자들이 병행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됨.

● <新평화구상> 군축논의, 파격적 신뢰구축제안 (8/16)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재래식 무기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남북의 재래식 무기 수준과 실제 군축협상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이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재래식 무기 군축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현재 단절된 군사 당국 간 협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남북간 전면적인 신뢰구축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됨. 하지만 북한 핵문제 논의가 담보를 거둬야 하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음.
- ◇재래식 무기감축 과연 논의될까 = 이 대통령의 재래식 무기 감축 언급은 단계를 뛰어넘은 파격적인 제안으로 풀이됨. 일반적으로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선 ‘정치적 신뢰구축→군사적 신뢰구축→구조적 군축’이란 단계를 설정하지만 이 대통령의 언급은 정치·군사 신뢰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적 군축, 즉 군축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이는 단계성을 뛰어넘어 핵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치·군사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용의가 있다는 의사 표명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임.
- 한국국방연구원(KIDA)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을 뛰어넘어 구조적 군축도 논의하자는 것은 군축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함. 특히 북핵문제에서 진전이 없고,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질적으로는 남한이 북한을 이미 역전시킨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 감축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임. 하지만 군축협상 제안은 현



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현 정부 들어 남북 간 긴장이 지속되고 있고 남북 모두 상대측의 선(先)조치만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축협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 KIDA의 김태우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긴장 해소는 물론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축협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적어도 대화와 긴장완화 조치가 군축논의와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환경이 현재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말함. 게다가 두 차례의 핵 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을 자처한 북한이 미국과의 핵군축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에서 남한과 재래식 무기 감축을 논의할지도 불투명함.
- 이런 배경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날 재래식 무기감축 언급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음. 한 군사전문가는 “현재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의 제안은 남북관계에 대한 원칙적 언급으로 본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군축제안에 담은 것 아니겠나”고 말함.
- ◇남북, 재래식 무기 현황 = 남한은 재래식 전력 면에서 북한보다 수적으로는 열세이지만 파괴력과 정확도, 기동성 등 전투력은 뛰어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임. 북한은 3천900여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연장 로켓과 방사포는 5천100여문, 지대지(地對地) 유도 무기는 100여기를 배치하고 있음. 장갑차와 야포는 2천100여대와 8천500여문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 이들 지상군 전력의 70%가 평양-원산 이남지역에 배치돼 있음. 특히 휴전선 일대에 집중배치돼 수도권을 사정으로 하는 1천여문 이상의 장사정포는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음.
- 해군 전력의 경우 기뢰부설과 수상함 공격 및 특수전 부대의 침투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함을 70여척 보유하고 있음. 수상전투함과 상륙함, 기뢰전함, 지원함은 각각 420여척, 260여척, 30여척, 30여척을 갖고 있고 수상전투함의 60%가 전진 배치돼 있음. 공군 전투 임무기는 840여대에 이르며, 이 중 약 40%가 평양-원산 이남 기지에 배치되어 있음. 공중기동기와 감시통제기는 각각 330여대, 30여대, 훈련기와 헬기는 각각 180여대, 310여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남한의 경우 장갑차는 2천400여대, 야포는 5천200여문을 보유하고 있음. 지대지 유도무기는 30여대(발사대)를 갖고 있으며 전차는 2천300여대, 다연장 로켓 및 방사포는 각각 200여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해군전력의 경우 전투함과 상륙함이 각각 120여척과 10여척이며 기뢰전함과 지원함은 각각 10여척, 20여척을, 잠수함도 10여척을 보유하고 있음. 전투임무기는 490여대로, 북한 공군에 비해 350여대가 적음. 공중기동기와 훈련기는 각각 40여대, 170여대며 감시통제기는 50여대, 헬기는 680여대를 보유하고 있음. 병력의 경우 남한은 65만5천여명이지만 북한은 119만여명으로 거의 두 배에



달하며 예비병력 역시 남한 304만여명, 북한 770만여명으로 차이가 많이 남.

● 인도당국 “나포 北 선박에 핵물질 없어” (8/14)

- 인도 당국은 최근 자국령 해안에서 나포한 북한 선박 MV 무산호에서 핵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힘. 인도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의 고위 경찰 관계자인 아쇼크 찬드는 “북한의 선박에서 어떤 핵 물질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북한 선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북한이 미사일이나 다른 무기를 여타 국가에 판매했다고 볼 수도 없었다며 “확신이 든 이후에야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인도 당국은 MV 무산호가 신고 있던 설탕 화물을 추가 조사할 계획임. 인도 당국은 자국령인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에 들어온 후 자국의 승낙 없이 허트 베이에 정박했던 MV 무산호를 8일 6시간가량 추격해 공포탄까지 쏜 끝에 나포함. 인도 당국은 특히 해당 선박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미얀마 인근에 갔는지를 조사하고 있음. 올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이후 북한 선박이 나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홍콩, 대북투자 ‘조선펀드’ 조사” <RFA> (8/14)

- 홍콩 정부는 대북한 투자기금인 ‘조선펀드’와 관련회사 2개에 대한 정보를 법 집행기관에 넘겨 대북 제재관련 현행 홍콩법에 대한 저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이 방송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대변인이 이 방송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조선펀드와 이 펀드의 자금운영사인 ‘앵글로아시아’, 그리고 앵글로아시아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고려아시아’가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홍콩 역시 아직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함.
- 홍콩 정부는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1718호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만들어 시행중이며, 최근에는 중국 외무성의 지침에 따라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보조법안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함.

● “北지원 미얀마 땅굴, 핵시설 징후 없어” <ISIS> (8/13)

- 미국의 민간 핵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가 북한의 지원을 받아 굴착중인 것으로 알려진 땅굴들 사진에서는 핵시설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 전함. 이 연구소 폴 브래넨 연구원은 VOA와 인터뷰에서 “지상에서 찍은 사진들에는 지하 또는 실내



로 보이는 저장소와 댐 수문, 터널 입구 등이 보이지만 핵시설의 흔적은 없다”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중앙에 원자로 건물이 있고 그 둘레에 보다 낮은 지붕들이 있고 냉각탑을 갖추거나 물가에 위치해야 하는데 공개된 사진들에는 그같은 특징이 없다”고 말함.

- 그는 “ISIS가 자체적으로 미얀마의 군사도시들에 대한 위성사진을 찍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최근 몇 년간 매우 많은 공사가 있었던 흔적이 있고 댐과 땅굴이 포착됐지만 핵시설과의 연계는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함. ISIS는 그러나 정보소식통을 인용, 정밀 기계류가 북한에서 미얀마로 전달됐으며, 핵관련 물질 구입 등을 이유로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은 북한 원자력중국 산하 남천강 무역회사관련 인물들이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 브래넨 연구원은 “기계류가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아 핵설비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민간 용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서는 북한과 미얀마 간 핵협력 의혹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다 자세한 정보가 파악돼야 한다”고 덧붙였음.

● 埃투자은행 “北 휴대폰 가입자 2년뒤 56만명 상회” (8/11)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2년 뒤인 2011년 말에는 56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이집트의 투자은행인 ‘나임 홀딩’이 이집트 이동통신회사인 오라스콤에 대한 투자전망 보고서에서 예상함. 보고서는 지난 3월 말 현재 1만9천여명에서 6월 말에는 4만 8천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올해말에는 12만3천명, 2010년 말에는 31만명, 2011년 말에는 56만 8천명 등으로 급증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함.
- 이에 따라 오라스콤이 75%, 북한이 25%의 지분으로 설립한 ‘고려링크’의 총수입도 올해말 4천300만달러에서 2010년말에는 7천만 달러, 2011년말에는 1억3천400만달러로 해마다 두배씩 늘어날 것이라고 ‘나임 홀딩’은 예상함. 보고서는 북한에서 그동안 휴대전화 사용이 극도로 제한됐으나 상황 변화로 수요가 급격히 늘 수 있고, 특히 유선전화 보급률이 지극히 낮은 점을 지적, 북한에서 휴대전화 가입자의 급증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뤄지거나 국제관계가 해빙되면 북한 경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점 역시 휴대전화 가입자 수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RFA는 소개함.
- 그러나 휴대전화의 급격한 보급이 북한체제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북한 지도부가 판단, 제동을 걸고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나임 홀딩 보고서의 급증 전망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임. 보고서는 “오라스콤이 이익금을 북한에서 이집트로 송금하는 방법 등을 북한 당국과 협상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라스콤 경영진이 북한



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음. 남북 합작기업인 평화자동차는 지난달 북한에서 공장 가동 6년만에 처음으로 수익금 50만달러를 평양지사에서 국내 본사로 송금했었음.

● 中 “김정일 건강상태 매우 좋다” (8/10)

- 중국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는 평가를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짐.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10일 “중국 측이 최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이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미국 측으로부터 설명받았다”고 밝힘. 이들은 또 “중국 측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먼저 미국 기자들을 성공적으로 데려왔으며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했고, 북·미 양자간 접촉을 개시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고 전함.
- 이들은 이어 “중국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라면서 “만약 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며, (중국은) 북한의 권력 공백상태를 바라지 않고 있다”고 말함.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 현장 시찰을 활발하게 다니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김 위원장이 위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함.

● <日 아소-하토야마, 핵 접근법 대비> (8/10)

- 일본 여당인 자민당 총재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와 제1야당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핵에 대한 상반된 접근법을 분명히 보여줌. 10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9일 나가사키(長崎)현 나가사키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폭자 단체 대표 등과 만나 비핵3원칙에 대해 “유일한 피폭국가로서 지켜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함.
-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가 1968년 1월 발표한 것으로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임. 그러면서 그는 “법제화를 하는 방법도 있다. 당 차원에서 제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함. 일본 언론은 이 발언을 “정권 교체 시 비핵 3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해석함.
- 그동안 하토야마 대표는 비핵3원칙은 ‘국시’로서 내걸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개정하거나 법제화하는데는 신중론을 견지해 왔었음. 반면, 아소 총리는 같은 날 나가사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에 핵무기 선제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핵보유국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핵을 선제공격으로 사용하지 않는 문제는 일본의 안전을 확보한 이후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해 부정적인 시각을 숨기



지 않았음. 아울러 아소 총리는 핵,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 자민당 내에서 제기돼 온 적기지 공격론에 대해서는 “적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 체계는 지금 자위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미·일 간의 구체적인 역할분담에 대한 것은 검토해 가겠다”라고 말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대북제재팀 23~24일 방한 (8/16)

-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 대북제재 전담반이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방한할 예정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16일 밝힘. 이에 앞서 전담반은 20일 싱가포르, 21일 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한국 방문을 마친 뒤 25일 일본을 찾을 예정임.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번 방한기간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한국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874호와 1718호의 이행 상황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한 외교소식통은 “골드버그 조정관이 특별히 새로운 제재사항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제재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인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오바마, 첫訪韓 11월 APEC전후 유력 (8/1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후 첫 한국 방문이 오는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전후해 이뤄질 것이 유력시됨. 미국 백악관은 13일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14-15일 개최되는 APEC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은 이 지역 방문 기간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방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개방과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 한편 이 지역과 세계의 주요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APEC 지도자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함. 기브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순방하게 될 아시아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순방계획이 결정되면 곧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함.

● <8.15 64주년> 혼다 “日 과거사 사과 불충분” (8/13)

- 미국 하원의 일본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던 미국 민주당의 마이클 혼다 의원은 일본의 과거사 사과 문제와 관련, “충분히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힘. 8.15 64주년을 맞아 강원대 초청으로 지난 10일 방한한 혼다 의원은 지난 11일 연합뉴스와 단독 인



터뷰를 갖고 “우리가 그동안 일본에 요구해온 것은 공식적이고 솔직한 정부 차원의 사과이며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그런 사과는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이어 “그동안 (일본에서) 개인들이 사과하거나 또는 과거의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깊이(true depth)가 없었다”고 지적함. Honda 의원은 특히 “일본은 공식적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나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과거의 일들을 돈으로 되돌리거나 보상할 수 없는 것을 물론이지만 일종의 제스처 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함.
- 그는 또 일본의 과거사 왜곡 논란을 거론, “일본은 아이들에게 과거 아시아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일들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거나 마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없애려고 한다”며 “학교 선생님 출신인 저로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함. Honda 의원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이들은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나는 항상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사실에 기반해 좋은 정보를 가르쳐야 하며 그래야 비판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함. 그는 “미국 외에도 9개의 다른 국가들이 위안부 결의안과 비슷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유엔 등에서도 이런 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나. 한·일 관계

● 일제강점기 군자금 모금활동 문서 공개 (8/13)

-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이뤄진 독립운동 군자금 모금 활동을 담은 문서가 공개됨. 이 문서에는 군자금 모금활동을 했던 만주지역 독립운동 단체와 직접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던 인물까지 수록돼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졌던 만주지역의 군자금 모금 활동에 대한 실상 연구에 촉매가 될 것으로 전망됨. 국가보훈처는 13일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된 만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거주제한 처분 보고서들을 엮은 자료집, ‘만주지역 본방인 재류(체류)금지 관계잡건’(本邦人在留禁止關係雜件)을 발간했다고 밝힘.
- ‘본방인’이란 일제강점기 일본인을 지칭하는 단어이며 재류금지는 특정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게 추방하는 것으로, 애초 일본인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중국 체류 조선인도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됐음. 1915년부터 1926년까지 기록된 이 문서들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 보훈처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이 해외사료수집위원인 일본 교토대 이승엽 교수를 통해 수집한 것임.



- 자료집은 구춘선을 수령으로 하는 국민회, 방우룡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의군을 비롯, 임시군정부, 북로군정서, 대한의군단, 대한통의부 등 단체들이 군자금 모집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르면 조영, 유인학 선생은 간도 지역의 조선인 밀집 지역인 연길현에 거주하던 중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용정 3.13 만세운동에 참여함.
- 이후 만세운동 참여자 검거가 대대적으로 이뤄지자 러시아로 이동해 블라디보스토크 및 니콜리스크 지방 등을 돌아다니다 구춘선을 수령으로 하는 국민회 동부지방 총장 양도현의 부하가 되어 국제연맹에 한국독립 승인 요청을 위한 대표단 파견 비용 모금을 위해 즉시 간도지역으로 돌아와 화전사 일대에서 기부금 모금활동을 벌이다 체포됐음. 이들은 1920년 2월6일 3년간의 재류금지 처분을 받는 동시에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으로 이송돼 사법처분에 회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오지화 선생은 1919년 만세운동 이후 독립운동에 뜻을 품고 1920년 5월 방우룡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의군에 가입, 무기구입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용정촌 부근에서 활동하던 중 1920년 10월12일 간도총영사관 경찰서에 체포돼 3년간 중국 재류금지 처분을 받았음. 장남섭 선생은 1919년 이후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간도 동량상리사 부근에서 독립에 힘쓰다 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봉천성 안도현으로 옮겨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고 이후 임시군정부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1919년 11월13일 체포됨.
- 장흥국 장의묵 현성도 황현범 석태화 선생은 1919년 가을부터 대한군정서 소속으로 북로군정서 수령인 서일 선생으로부터 일대 수십개 촌의 관리를 위임받아 군자금 조달 활동을 벌였음. 이들은 1920년 8월20일 3년간 재류금지 처분을 받았음. 송길산 선생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직업을 버리고 대한의군단에 가입, 총기를 휴대하고 간도 연길현 등지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다 1920년 10월11일 간도총영사관 경찰서에 체포돼 3년간 재류금지 처분을 받았음. 자료집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만주지역 각 종교단체의 활동도 나와있음.
- 오세환 이윤백 선생 등 8명은 1921년 11월 워싱턴 회의 개최 소식을 듣고 이에 맞춰 만세시위운동을 벌이고자 천도교청년동맹회라는 비밀단체를 결성함. 하지만 이를 눈치챈 일제에 의해 일거에 체포돼 3년간 중국 재류금지 처분을 받았음. 정풍산 선생은 중국의 촌장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대한국민회 화룡현 칠도구 지회장을 맡아 회원을 모집하고 군자금 모금활동을 벌였음. 또 김병원 김명세 선생과 함께 천주교 신도에 의해 조직된 비밀결사 대한의민단에 투신해 천주교회당을 본거지로 활동하던 중 체포돼 3년간 중국 재류금지 처분을 받았음.
- 석창수 선생은 의군단에 투신해 탁발로 가장해 간도 지역을 돌며 군자금 모금에 나서다 체포돼 1921년 10월부터 1년간 재류금지됨.



김중건 홍윤화 김현필 오 흥 선생은 1913년부터 원종교를 중심으로 종교 포교선전에 힘쓰다 대진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 의연금 모금 활동을 하다 체포됨. 아울러 자료집은 3.1운동 이전에 서울에서의 만세운동을 듣고 간도로 가서 격문을 배포하고 동지를 규합해 시위운동을 기획하는 과정과 그 참여자가 기술되어 있는 등 북간도 용정의 3.13 만세운동과 국내의 연관관계도 보여주고 있음. 640여 쪽에 이르는 이 자료집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할 당시 찍었던 103장(175명)의 사진도 담고 있음.

● 시민단체 ‘日 왜곡교과서 채택 철회’ 촉구 (8/12)

-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12일 역사를 왜곡한 후소샤(扶桑社) 교과서를 채택한 일본 도쿄(東京)도 스기나미(杉並)구 교육위원회에 결정 철회를 촉구함.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스기나미구 교육위원회는 오늘 일본의 침략행위를 왜곡하고 전쟁을 미화하는 후소샤 역사교과서를 2010년도 중학교 교재로 채택했다”며 “위원회의 결정은 일본의 식민지배로 고통받은 한국인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입힌 행위”라고 비난함.

다. 미·러 관계

● 메드베데프 대통령, 9월 미국 방문 (8/14)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월 유엔 총회와 주요 20개국(G20) 금융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고 14일 이타르 타스 통신이 보도함. 세르게이 프리호드코 크렘린궁 대외정책보좌관은 이날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9월 23~24일 유엔 총회, 25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힘.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지난해 11월 워싱턴 G20 금융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임.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번에 유엔 5개 상임이사국 정상회의와 유엔 총회 개막식에 잇달아 참석해 국제 안보와 테러 위협 등에 대한 러시아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짐. 또 지난 7월 모스크바를 찾아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 계기를 마련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재회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다시 확인할 것으로 관측됨. 특히 두 정상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중동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임.

라. 기타

● 泰, 아세안 정상회의 후아한.차암서 개최 (8/15)

- 태국 정부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후아한과 차암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태국 관영 TNA 통신이 15일 보도함. 태국 정부는 아세안



+3 정상회의를 당초 10월 23-25일 푸켓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안 문제 등으로 회의 장소를 휴양지인 후아힌과 차암으로 변경함. 후아힌은 수도인 방콕에서 서남쪽으로 230km, 차암은 178km 정도 떨어져 있음.

● 인도,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8/14)

- 최근 한국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한 인도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자유무역 협정도 마무리 지음. 아난드 샤르마 인도 통상산업부 장관은 13일 방콕에서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폰티아 나카사이 상무장관과 함께 협정 서명식을 가졌다고 PTI통신이 보도함. 이로써 인도는 한국에 이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10개국을 자유무역 대상으로 확보하게 됨.
- 인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협정은 내년 1월1일 공식 발효되며 전자제품과 화학제품, 기계류, 섬유를 포함한 양 지역간 수출입 품목 가운데 80%의 관세가 2013년 또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됨. 그러나 489개 농산품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아세안 회원국들이 취약한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분야도 양허 대상에서 제외됨.

● 남중국해 영유권 외교 갈등 일단락 조짐 (8/13)

- 파라셀(西沙)군도 등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베트남과 중국 간의 외교적 갈등이 중국의 억류 베트남 어민 석방 조치로 표면적이나마 일단락되는 조짐임. 레 중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중국 정부가 파라셀군도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억류 중인 베트남 어민 25명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중 대변인은 지난 11일 중국 외교부가 베이징 주재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억류 어민들의 석방과 함께 나포한 어선 한 척도 귀환시키기로 했다는 결정을 통보했다면서, 베트남은 중국의 이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억류 어민들은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중 대변인은 덧붙였음.
- 앞서 중국은 지난 6월 21일 자국령이라고 주장해온 파라셀 군도에서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 한 척과 어민 12명을 억류함. 중국은 이어 지난 1일에도 태풍으로 긴급 대피하기 위해 파라셀 군도에 접근하던 베트남 어선 한 척과 어민 13명을 억류해 접근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옴.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영해에서 정상조업 중이던 자국 어선과 어민들을 중국이 억류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즉각 석방과 귀환을 촉구하는 한편, 베트남 측 관할 하에 있는 영해에서 조업 중인 베트남 어민들의 활동을 금지한 중국 측의 조치를 거둬줄 것을 강력 요청함.
- 중국 농업부남해구위정국 귀진푸(郭錦富) 부국장은 파라셀군도에서 외국 선적의 어선들이 폭약, 독약 등을 사용해 불법 어로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시설물을 절도하거나 파괴하며, 불법 시설물을 건축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어업지도선을 파견했다고 주장함. 이에 맞서 베트남은 또 다른 분쟁해역인 스프레틀리(南沙)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5월 6일 말레이시아와 공동으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에 관한 경계 획정 제안서를 제출함.

● <수치 가택연금 연장에 국제사회 대응 분주> (8/12)

- 미얀마 군사정부가 11일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 ‘가택연금 18개월 연장’이란 조치를 취하자,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섬. 각국 정부 및 주요 단체는 미얀마 군정을 한목소리로 비난하는 한편, 미얀마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모색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임.
- ◇ 비난 여론 봇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수치 여사에 대한 평결은 부당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미얀마 군정은 수치 여사를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밝힘.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역시 수치 여사에 대한 재판이 열린 것 자체가 잘못이라면서 그의 석방을 촉구함.
-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웨덴도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정을 비난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EU 차원의 강화된 제재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수치 여사에 대한 재판을 “부끄러운 재판”이라 부르면서 미얀마 군정이 국제법을 철저히 무시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으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역시 이번 재판이 “수치 여사를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서 끌어내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열렸다고 비난함. 말레이시아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즉각 긴급회의를 개최해 수치 여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함.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이번 판결로 수치 여사가 내년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면서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긴급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호주 역시 미얀마 군정의 조치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비난 대열에 가세했으나, 군정 통치 국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은 논평을 내지 않았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해 미얀마 군정의 결정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면서 군정이 수치 여사를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함.
- 이와 관련, 미얀마 국영 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국제 사회가 미얀마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수치 여사의 지지자들에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거리 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함.
- ◇ 국제사회 대응 =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열어 수치 여사 문제를 논의함. 프랑스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은



안보리가 미얀마 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와 관련된 합의 사항을 도출해내지는 못함.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의 존 사우어스 대사는 “성명 채택안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으나, 일부 대표들이 이 문제를 본국과 상의하길 원했다”면서 회의가 12일 오후께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이날 논의된 성명 초안은 미국이 입안한 것으로, 수치 여사를 포함한 미얀마 내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수치 여사에 대한 평결이 미얀마 정치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고 있음.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5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성명을 지지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중국과 러시아·베트남·리비아는 성명 채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EU도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EU는 (미얀마) 국영기업에 대한 무역 규제, 수치 여사 관련 평결에 관여한 인사의 EU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추가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이와 관련, 브라운 영국 총리는 전 세계가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미얀마에 대한 새 제재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특히 군정이 수익을 거두는 목재 및 보석류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함.
- ◇ 현행 미얀마 관련 제재는 = EU는 1996년 ▲무기 수출 금지 ▲군부 인사 및 가족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군부 지도자 및 기업 120곳에 대한 해외 자산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대(對) 미얀마 제재를 발동함. 또 미얀마 군정이 승려들이 중심이 된 민주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2007년에는 유럽 기업들이 미얀마와 목재, 광물, 보석, 철금속 등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추가 제재조치를 마련한 바 있음.
- 미국 역시 1997년 ▲미국 기업 및 개인의 대(對) 미얀마 투자 금지 ▲미얀마산 물품 수입 금지 및 무기 수출 금지령을 골자로 하는 제재조치를 채택했으며,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 군부 인사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 제한 조치를 추가함.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는 그간 중국의 반대로 미얀마에 대한 제재안이 한번도 채택되지 못함.

● 한-브라질 자원협력 포럼 개최 (8/12)

- 한국과 브라질의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투자정보 교류를 위한 자원협력포럼이 11일(현지시간) 리우 데 자네이루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림. 이날 포럼은 브라질의 대형 유전 개발과 플랜트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양국 기업인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됨.
- 한국 측에서는 대통령 경제협력특사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을 비롯해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성기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부회장



등 자원협력 사절단과 조규형 브라질리아 주재 대사, 김건영 코트라 상파울루 코리아비즈니스센터장, 현지진출 업체인 포스코, STX, 동국제강, SK에너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함. 브라질 측에서는 국영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 세계적인 광산개발업체인 발레(Vale), 브라질 조선협회(SINAVAL), 광업협회 등 주요 업체와 단체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함. 이 특사는 브라질이 한국의 세계 18대 교역국이자 중남미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최근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한국 기업의 투자 의욕이 높아진 만큼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이 특사는 특히 “브라질이 보유한 심해유전과 한국의 우수한 조선-플랜트 산업이 융합한다면 ‘원-원 전략’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시추선과 해양 플랜트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한 관계자는 브라질리아와 리우로 이어지는 방문 기간 페트로브라스가 향후 5년간 발주할 300억달러 규모의 부유식 원유저장·하역설비(FPSO) 및 드릴십 등 장비 수주와 대서양 심해유전 개발사업 참여 문제 등이 협의됐으며, 브라질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및 고속철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짐.

● 中, 濠 리오턴토 직원 정식 구속 (8/12)

- 중국 검찰은 12일 호주 철광석생산업체 리오턴토 직원 4명을 산업스파이 혐의로 정식 체포·구속함. 상하이검찰원은 리오턴토 상하이 사무소 수석대표인 중국계 호주인 스텐 후(胡士泰)와 류차이쿠이(劉才魁), 거민창(葛民强), 왕용웨이(王勇爲) 등 중국인 직원 3명에 대한 공안의 체포를 승인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함.
- 검찰에 따르면 리오턴토 직원들은 중국 측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해 상업적 기밀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음. 검찰은 또 리오턴토 직원들에게 상업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중국 철강업계 관계자들도 정식 체포·구금함. 중국의 이 같은 결정으로 리오턴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중-호주간 외교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 호주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중국 측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나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고 리오턴토 직원들의 석방을 위해 케빈 러드 총리까지 나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허사였음. 중국 공안당국은 지난 8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리오턴토 직원들이 지난 6년간 포섭과 뇌물 청탁, 엽담, 기만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한 스파이 활동을 벌여 중국에 7천억위안(약 126조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 26개국 외교사절 신장위구르자치구 시찰 (8/11)

- 중국에 주재하는 외교사절들이 지난 7월5일 유혈시위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를 방문하고 있음. 중국 신문들은 11일 세계 26개국 외교관들이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의 초청으로 1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함. 이번 행사는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지난 수십년간 정치, 경제, 종교정책, 문화유산 보전 등 각 분야에서 이룩한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한 것임. 신장위구르자치구 시찰에는 미국, 쿠웨이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시리아, 터키, 아프가니스탄, 스웨덴, 호주 등의 외교관들이 참여하고 있음.

● 중국, 카디르 초청연설 취소 압박 (8/11)

- 중국이 멜버른국제영화제(MIFF)에 초대돼 호주를 방문중인 위구르족 인권운동가 레비야 카디르(62.여)의 내셔널프레스클럽 초청연설을 취소하도록 프레스클럽측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밝혀짐. 캔버라주재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주 프레스클럽 이사들을 만나 “11일 있을 카디르의 프레스클럽 초청연설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 이 관계자는 3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카디르의 프레스클럽 연설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언이 보도함. 중국은 카디르의 MIFF 초대와 관련, 중국 감독들의 참여 거부, MIFF 홈페이지 해킹, 카디르 반대 항의시위 등으로 다각도의 압박을 가해 온 데 이어 프레스클럽 초청연설마저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음.
- 프레스클럽의 한 이사는 “중국 대사관 관계자가 카디르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프레스클럽 초청연설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힘. 그는 “이 관계자가 카디르의 연설이 진행될 경우 중국과 호주 양국 관계에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전함. 프레스클럽 회장 모리스 라일리는 면담내용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대신 “우리는 카디르의 연설을 들을 자격이 있으며 이런 뜻을 서한을 통해 중국 대사관측에 전달했다”고 말함.
- 프레스클럽은 당초 계획대로 카디르 초청연설과 텔레비전 중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함. 또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초청해 현재 중국 공안당국에 억류돼 있는 스티븐 후 등 철광석생산업체 리오턴토 상하이사무소 직원 석방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함. 카디르는 중국의 이같은 행동과 관련, “호주는 민주주의 국가로 중국의 한 지역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권위주의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함.